



주간통일정세 2011-40(2011.09.26~10.0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1-40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北최영림, 中원자바오와 회담(9/26, 연합뉴스)

- 최영림 북한 내각총리가 26일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최 총리는 방중 이틀째인 26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4박5일의 방중 기간에 최 총리는 난징(南京)과 양저우(揚州)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양저우는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투먼(圖們)을 통해 방중하고서 무단장(牧丹江)-하얼빈(哈爾濱)-창춘(長春) 등 동북지방을 돌다가 갑작스럽게 특별열차로 2천여km를 달려 방문했던 곳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 총리가 베이징 일정 외에 상하이(上海)와 장쑤(江蘇)성을 찾아가 현지를 참관할 것"이라고 확인
- 홍 대변인은 "최 총리가 원 총리의 초청으로 정식 우호 방문했다"며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최근 양국 간에 각 영역에서 교류가 심화하고 있고, 최 총리의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논평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난해 5, 8월 방중에 이어 최 총리가 같은 해 11월 1~8일 중국을 방문해 하얼빈, 창춘(長春), 지린(吉林),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동북 3성을 두루 돌면서 북중 경협 행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최 총리의 이번 난징, 양저우 방문도 그와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

##### ● 北 국가건설감독상 교체...김석준 임명(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배달준 국가건설감독상을 해임하고 후임에 김석준 전 백두산 건축연구원 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26일 확인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중국 방문에 나선 최영림 내각 총리가 평양을 떠났다고 전하면서 "노두철 내각부총리, 김석준 국가건설감독상 등이 함께 떠났다"고 밝힘.
- 남한의 국토해양부와 유사한 국가건설감독성은 북한에서 국토·산업·도시·농촌 등 건설관계 분야를 일괄적으로 통합 관할하는데, 북



한은 1998년 5월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국가건설위원회를 국가건설감독성으로 개칭

- 북한의 국가건설감독상 교체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진행되는 평양 10만호 주택 건설사업의 성과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이거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세대교체의 일환일 것으로 추정

#### ● 北, 당대표자회 1주년 맞아 세습 정당성 강조(9/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작년 9월28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 1주년을 맞아 세습의 정당성을 26일 다시 한 번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조선의 대진군'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백두의 혈통을 이어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2012년을 향한 대고조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년간의 투쟁행로가 보여준 총화"라고 주장
- 이 매체는 "이 철리가 9월9일에 진행된 국가 창건 63돌 경축 노동적 위대 열병광장에서 확증됐다"며 "당대표자회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라는 것을 체득했다"고 선전
- 매체는 또 지난해 당 창건 65주년 열병식, 평양방직공장 등 경공업 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주체철 생산체계 완성,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김일성상 계관작품 선정 등 당대표자회 이후 이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열거
-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고려해 지난 2월 열린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소개하며 '청년 대군은 강성국가 건설의 주역'이라고 강조했고, 김정은의 대표적 업적으로 알려진 'CNC'(컴퓨터수치제어)를 여러 차례 강조

#### ● 북·중, 총리회담서 경협강화 약속(9/27, 신화통신)

- 북한의 최영림 내각총리와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무역·투자·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
- 회담에서 원 총리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당과 정부는 양자 관계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교류, 전략적 접촉 심화 및 공통 이익 보호에 노력하자"고 강조
- 원 총리는 이어 "최근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찬사를 보낸다"며 "중국은 북한과 더 많은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가겠다"고 덧붙이면서, "중국은 북한이 자국 사정에 맞는 발전방식을 찾아가는데 지지를 보내며 (그와 관련해) 능력이 닿는 대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 및 "양국이 무역·투자·사회간접시설·자원·농업 등의 분야에



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에 속도를 내자"고 역설

● **김정일, 故 박용길 장로에 조전(9/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고(故)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의 유가족에게 조전(弔電)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조전에서 박용길 여사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박용길 여사는 것처럼 바라던 통일의 봄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애석하게 떠났지만 그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바친 애국의 낮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앞서 북한 김양건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은 26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팩스를 보내 지난 25일 별세한 박용길 장로의 장례에 관해 협의하자며 유족과 장례위원회 관계자의 개성 방문을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

● **"남북선언 실천 땀 평양·서울서도 대화"(9/28,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8일 "북남선언의 정신을 실천할 때 6자회담 틀에서 북남공조는 그 실효성을 발휘한다. 평양, 서울에서도 민족현안을 다루는 북남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이날 '10·4선언, 지금도 유효한 평화합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바로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통일의 과정과 병행시키는 방도"라고 주장
- 신문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에서 "재임 중 내가 할 역할은 통일의 날이 오도록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연설한 데 대해 "그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정책을 전환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
- 신문은 최근 남북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과 관련해 "남측의 의도가 북측이 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 지목하는 미국의 대변자 노릇을 맡는 것이라면 그런 회동은 다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

● **"北 당조직 충성파로 세대교체 완료"(9/28, 북한소식)**

-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22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 한동안 진행됐던 중앙당 김열이 당창건일(10월10일)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함.
- 이미 지난 4~6월 중앙당과 도당 단위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고, 시당과 군당 일꾼 대부분은 당창건일을 전후해 새로 임명될 예정이며, 어



면 부서는 기존 구성원의 70~80%가 바뀌기도 해 거의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 측은 분석

- 연구소는 "새로 등장한 인물들은 대체로 북한정권 창건 이래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거나 혁명 3~4세대"라며 "충성심은 대단하지만 경제난과 식량난은 체감하지 못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힘.

● **北총리, 상하이서 2010엑스포 중국관 참관(9/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28일 중국 상하이시의 기업 2곳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중국관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 내각 총리 최영림과 일행이 상하이시의 바오산철강 그룹유한공사, 백련서교상품구입센터를 돌아보고 2010년 상하이세계 박람회 중국관을 참관했다"고 전함.

● **방중 北총리, 김정일 다녀간 판다전자 참관(9/29, 조선중앙통신)**

- 중국 방문 나흘째인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가 29일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의 판다전자(熊貓電子) 등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 총리 최영림과 그 일행이 이날 장쑤성 소재지(省都)인 난징시의 여러 곳을 참관했다"며 "최 총리 일행은 지난 5월 중국 방문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난징중전판다액정현시과학기술유한공사(판다전자)를 돌아봤다"고 전함.
- 지난 26일 닷새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 총리는 앞서 중국내 육류 가공 기지로 이름난 위룬(雨潤)식품산업집단유한회사와 쑤원(孫文)이 묻힌 중산릉(中山陵) 등지도 돌아봤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김계관, 데니소프 러 외무차관과 회담(9/29, 조선중앙통신)**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9일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과 평양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의 회담이 29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회담의 제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데니소프 차관은 방북 이틀째인 이날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환담했고 북·러 친선을 상징하는 '해방탑'에 헌화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일, 후진타오에 中 건국 62주년 축전(9/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일 중국의 건국 62주년 기념일(10월1일)을 앞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오늘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고 밝힘.
-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의 공동명의로 된 축전은 후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전달

#### ■ 기타 (대내 정치)

- 양형섭, 9.26 쿠바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과 일행 만나 담화(9/26, 중 통)
- 박의춘 외무상, 9.26 駐北 수리아아랍공화국 대사와 담화(9/26, 중 통)
- 최영림 내각총리, 9.27 '후진타오' 中 주석 의례방문(9/28, 중통)
  - 노두철(내각부총리), 리수용(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용남(무역상), 김성기(외무성 부상), 지재룡(駐中 北 대사), 장즈찐(상무부 부장), 류홍차이(駐北 中 대사), 천스취(주석 판공실 주임), 장쿤성(외교부장 조리) 등 참석
- 박의춘 외무상, 9.28 駐北 나이지리아 新任 대사('맥클린 이고니콘 오무쓰')와 담화(9/28, 중통)
- 北 최영림 총리, 9.28~29 '한정(상하이시인민정부 시장)', '리쉬에웅(장쑤성인민정부 성장)'과 담화 및 연회(9/29, 중통)
- 양형섭, 9.29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을 만나 담화(9/29, 중통)
- 김영일, 9.29 中國공산당대표단(단장 : '귀성쿤' 광시장족자치구위원회 서기)과 담화 및 연회(9/29, 중통)
- 최영림 총리, 9.28~29 '한정(상하이시인민정부 시장)', '리쉬에웅(장쑤성인민정부 성장)'과 담화 및 연회(9/29, 중통)
- 양형섭, 9.29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을 만나 담화(9/29, 중통)
- 김영일, 9.29 中國공산당대표단(단장 : '귀성쿤' 광시장족자치구위원회 서기)과 담화 및 연회(9/29,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일행, 9.30 장쑤성 양저우市(양저우경제기술개발구 지곡전람센터, 정오테양에네르기과학기술공사 등) 참관 後 귀국(9/30, 중통)
- "김정일의 선군영도따라 軍民대단결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 2012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며 '인민군대의 전투적 기질 구현과 대담한 최첨단돌파전' 독려(9/30, 중통·노동신문)
- 최영림 내각 총리, 9.30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訪中 한대 및 朝-中친선 협조관계 확대발전" 표명 「감사전문」 발송(10/1, 중통)



## 나. 경제

### ● 中 조선족 기업가협회, 北라선 방문(9/27, 연합뉴스)

-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이 최근 북한 라선특구를 방문,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7일 조선족기업가협회에 따르면 표성룡 회장을 단장으로 한 회장단 16명이 지난 17-19일 라선특구를 방문해 라선시로부터 라선특구 개발 추진 상황과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소개받았으며, 방문단은 이어 라선의 제조업 시설과 호텔, 시장, 의류 가공 공장, 라선시장 등을 시찰하며 라선 진출의 적정성 등을 점검 및 이들은 또 조선족 기업인들이 라선특구에 독자적으로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북한과 논의
- 표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들은 이달 말 라선을 다시 방문해 북한 측과 투자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
- 조선족기업가협회가 대북 투자와 관련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인데, 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권 65주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모든 체류 경비를 부담하며 조선족기업가협회 임원 30여 명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열었으나, 이번 방북은 조선족기업가협회가 북한에 요청해 이뤄졌고 경비도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짐.

### ● 北리종혁 "가스관사업 남북리 모두에 이익"(9/27, 제4언론)

-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남북리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독립 언론매체인 '제4언론'이 27일 보도
- 이 매체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이 이뤄지면 우리도 덕을 본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보다 남측이 더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북한)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테두리를 벗어나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조선반도와 동북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리 부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남측이 요구하는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최고 수준에서 합의해줬다. 문제는 남조선 당국의 대북 대결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고, 남측의 금강산 관광은 새로 제정된 법에서도 현대아산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결국 "남측 당국에 달렸다"고 강조

### ● 국제적십자사 "北 작년 재해로 9만5천명 피해"(9/28,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9만5천여 명에



달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을 인용해 28일 보도

- IFRC가 최근 발표한 '2011 세계 재해 보고서'(World Disaster Report 2011)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해로 사망한 북한 주민이 30명이라고 밝힘.

● "황금평·라선 공동개발 구체안 연말에 나와"(9/28, 차이나데일리)

-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라선지구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28일 단둥(丹東)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 다이위린 단둥시 당서기는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북·중 양국이 황금평과 라선에 공동으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후속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힘.
- 다이 서기는 "황금평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북 공동관리위원회가 이미 설립됐다"면서 "황금평과 라선지구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임.
- 그는 아울러 "중국 측은 황금평 공동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지역에 10km<sup>2</sup> 크기의 국가급 경제구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는 이어 "단둥시 정부는 황금평 공동개발을 위해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 탱크를 운영하며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함.

● "北, 터키에 인도적 지원 요청"(9/29, 미국의소리(VOA))

- 궁석웅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이달 초 터키를 방문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터키 일간지 '후리에트'를 인용해 보도
- 후리에트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 7~8일 터키를 찾아 터키 외무부 당국자들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터키 측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터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에 유아용 식품을 지원기로 했고 쌀 등 일반 식량의 지원은 터키 정부가 군대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전함.

● "北 탄소배출권사업 순조...3곳 추가 심사"(9/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을 신청한 9개 사업 중 3개가 추가로 '자격심사'를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UNFCCC는 지난 27일 함흥 1호 발전소와 금야수력발전소를 자체 홈페이지에 '자격심사' 대상 목록에 올렸고 28일에는 백두산 선군청년2호 수력발전소도 목록에 추가
- 이미 지난 6월부터 자격심사를 받는 예성강 3·4·5호 발전소와 원산 군민발전소 등 4곳을 포함하면 북한이 CDM등록을 신청한 9개 CDM사





업 중 7개가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되었으며, 평양방직공장과 함흥 2호 발전소는 아직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단계에 있다고 방송은 전함.

- UNFCCC는 CDM등록 신청 사업에 대해 '사전고려대상' 단계를 거친 뒤 사업계획서 검토와 실제 온실가스 감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격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탄소배출권 획득까지는 2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
-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은 유럽의 한 민간단체에 탄소배출권 획득 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했으며 이 단체는 기술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RFA는 덧붙임.

● "北, 8월 中서 곡물 수입 급증"(9/29, 연합뉴스)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이 29일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중국에서 곡물 4만7천978t을 수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는 지난 7월 1만9천384t에 비해 147.5%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달 1만6천723t보다 186.8% 많은 양으로 올해 들어서는 5월 5만328t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밀가루 1만7천458t, 옥수수 1만3천286t, 쌀 1만417t, 콩류 6천817t 등의 곡물을 골고루 들여옴.
- 권 부원장은 "북한이 가을 수확을 앞두고 8월에 곡물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며 "곡물 재고량이 많지 않아 수입량을 늘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함.

● WFP "주북 인도대사, 식량분배 현장방문"(10/1, 세계식량계획(WFP))

- 산자히 싱 북한 주재 인도대사가 지난달 14일 평양 외곽의 보육원과 병원을 직접 방문해 인도가 지원한 식량의 분배현황을 점검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1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밝힘.
- WFP는 또 인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콩 900t과 밀 373t 등 1천273t의 곡물이 어린이와 임산부 12만여 명에게 전달됐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올해 국제특허 출원 1건에 그쳐"(10/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올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국제특허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WIPO의 사관 사문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국제특허를 한 건만 출원했다"며 "올해 4월 출원했는데 어떤 종류 인지는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고 말함.
-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은 2007년 3건, 2008년 7건을 각각 기록하고 나서 2009년에는 전혀 없다가 지난해에는 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RFA는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이 저조한 것은 법체계의 미비로 창작가 개인의 재산과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 "北 휴대전화, 통치 활용 수단"(10/2, BBC)

- 휴대전화 확산이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통치에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2일 보도
- BBC는 이날 '북한, 휴대전화는 좋은 물건인가?(North Korea: Are mobile phones a good thing?)'라는 보도를 통해 대형 풍선을 이용한 남한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현황을 전하면서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지 모른다"고 풀이
- 이 방송은 "요즘 북한 내 뉴스는 문자 메시지나 DVD로 유포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북한은 인터넷 접속과 국제전화 통신망은 없지만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소비자들에게 인기 높은 품목으로 새로운 기술이 영향을 미치고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함.
- BBC는 주민들의 이동 통신 접속 가능성이 북한 정권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그 이점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풀이했는데, 이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국이 사용자들을 쉽게 추적 및 도청하고 메시지를 더 교묘하게 퍼뜨리며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30차 윤이상음악회' 개막공연, 9.27 안동춘(문화상), 흥성화(윤이상음악연구소 부소장) 등 참석下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9/27, 중통)
- 中 신해혁명 100돌 기념 사진전시회 개막식, 9.27 최창식(조종천선협회 위원장/보건상), 駐北 中 임시대리대사 등 참석下 평양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9/27, 중통)
- 평양-하얼빈 국제항로 1차 中國관광단, 9.28 국제친선전람관 등 관람(9/29, 중통)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 9.30 양강도 혜산시에서 첫 개막(9/30, 중통)
- 「국제노인의 날」 (10.1, 제45차 유엔총회 제정) 즈음 '조선년로자보호연맹' 주최 北送 비전향장기수 등 노인들 참가, 평양 등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낚시질경기·민속유희오락경기·공연·영화 관람 등) 진행(10/1, 중통·중방)
- 김일성종합대학 창립(46.10.1) 65돌 즈음 김정일의 "1,400여건 著作 발표 등 대학교육사업의 원칙적문제 해결" 칭송 및 전자도서관·수영관 등 完備 선전(10/1, 중통)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제12권(증보판) 출판(10/1, 중통·중방)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美재무부 차관, 北·이란제재 협의차 방중(9/26, 연합뉴스)**
  -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한다고 미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재무부는 "코언 차관의 이번 방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끊고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
  - 재무부는 코언 차관이 이란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도 중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함.
  
- **美 "北 진정성 판단할 충분한 증거 없어"(9/2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크 토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대화 진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쪽으로 판단할 충분한 사례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판단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신중히 답함.
  - 그는 "우리는 여전히 남북 간의 개선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책임은 확실히 북한에 있다"고 말함.
  
- **월스텐홈 신임 駐北 영국대사 30일 부임(9/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주(駐)네덜란드 영국대사관의 카렌 월스텐홈 1등 서기관이 오는 30일 북한 주재 영국대사로 부임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영국 외무부를 인용해 보도
  - 월스텐홈 신임 대사는 198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부영사로 해외근무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영국 부대표로 일함.
  
- **스티븐스 美대사 "北 말보다 행동이 중요"(9/27, 연합뉴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조만간 재개될 북미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목적의 진정성'(seriousness of purpose)이라고 부르는 진지함을 북한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스티븐스 대사는 서울 정동 미대사관저에서 임기 중 국내 언론과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것이 6자회담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 "남북 간에 소통을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평양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노력이 이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함.
- 그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약속했던 국제사회 의무들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6자회담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임.
- 스티븐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한·미·일이 제시하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6자회담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풀이
-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없다"면서 "대북 식량지원 결정은 수요에 대한 평가와 타지역 지원과의 균형, 분배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

#### ● 후진타오 "北의 긴장완화 노력 지지"(9/28, 신화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후 주석은 27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북한의 최영림 내각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
- 신화통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방중 때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 총리도 김 위원장의 그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후 주석은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를 소중히 간직해 왔으며, 중·북 우호관계 축진은 중국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몇 년 새 양국이 밀접한 정치적 교류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성과 있는 협력을 하고 있다"고도 언급
- 후 주석은 이어 "중·북 우호는 여러 대에 걸쳐 양국 지도자들이 이룩하고 지켜온 것으로 양국 당과 인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이를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것이 공통된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함.

#### ● 휴즈 전 주북대사 "권력승계에 전폭지지 없어"(9/28, 연합뉴스)

- 피터 휴즈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28일 "외국인인 나에게 직접 불평한 북한 주민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통해 들은 바로는 (권력) 승계과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휴즈 전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통 중요한 행사에서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든다. 그때 김정은이 누구냐고 물으면 단지 김정은 장군이라고 하지 후계자나 새로운 지도자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말함.



- 그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권력승계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리더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부상한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언급
- 휴즈 전 대사는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지만, 중동의 민주화 혁명처럼 확대될 개연성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매우 억압적이고 통제된 국가여서 공동대응이나 반발은 어렵다"고 내다봄.

●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 방북(9/28, 조선중앙통신)**

-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이 2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 중앙통신은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나 방북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북한과 러시아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등에 합의해 데니소프 제1차관은 방북 기간 양국 간 경제협력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

● **美 재무 차관 "北, 여전히 WMD 확산에 전념"(9/29, 연합뉴스)**

-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28일 북한이 여전히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용 설비와 부품을 밀수입하고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위장기업을 세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코언 차관의 발언은 이번 주 북한의 최영림 내각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중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음을 시사

● **프랑스 "평양 상주사무소 수일 내 개설"(9/29, 연합뉴스)**

- 프랑스가 북한 평양에 추진 중인 상주 협력사무소가 수일 내에 개설될 것이라고 프랑스 외교부가 29일 밝힘.
- 베르나르 발레로 외교부 대변인은 "상주사무소 설치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수일 내에 문을 연다"면서 "상주사무소는 문화교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현지 언론이 전함.
- 상주사무소는 문화협력 전문가이자 외교관인 올리비에 바이세가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발레로 대변인은 덧붙임.
-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2월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해 문화 교류를 위해 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설이 늦어짐.



● 르몽드 "北-미얀마, 지속적 관계"(10/1,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지 르 몽드가 1일 세계의 불량국가들인 미얀마와 북한이 무기-식량 교환을 매개로 군사분야 협력을 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보도
- 르 몽드는 이날 세계의 편지 시리즈 가운데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에서 온 편지' 형식으로 게재한 양곤발 기사에서 양곤의 변화가에 지난 7월 '평양고려식당'이라는 이름의 북한 식당이 들어섰다면 이렇게 전함.
-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미얀마가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북한의 아웅산 폭탄테러 이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가 2007년 복원했지만 사실상 1993년부터 군사협력을 위해 북한의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미얀마에 입국하는 등의 관계를 맺어옴.
- 특히 미얀마는 북한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에는 2만t의 쌀을 수출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바 있으며, 르 몽드는 이런 상황에서 양곤에 북한식당이 문을 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북한이 '음식'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

나. 6자회담(북핵)

● 양제츠 "6자회담, 비핵화 진전에 가장 유효"(9/27, 신화통신)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가장 유효한 메커니즘"이라고 밝힘.
- 양 부장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반도 이슈를 풀어 가는데 대화와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
- 양 부장은 "중국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평화 촉진에 노력해왔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 유지에 유일무이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중국은 최근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환영하고 유관 각 측이 이를 기회로 대화를 지속해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양 부장은 아울러 유엔 총회 연설에서 "리비아의 전후 재건 작업은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중국은 유엔의 '리비아 지원 유엔 사절단(UNSMIL)'이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활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박길연 "6자회담 재개위해 당사국들과 협력"(9/28,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회담 당사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평화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당사국들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 부상의 이날 발언은 기존의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라고 뉴스는 전함.
  - 박 부상은 북미관계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모든 근원은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
- **中 "6자들서 관련국 관심사 해결돼야"(9/28,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회담 당사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평화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당사국들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 부상의 이날 발언은 기존의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라고 뉴스는 전함.
  - 박 부상은 북미관계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모든 근원은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
- **"北, 한국에 핵연료봉 매입 요청"(9/30, 아사히신문)**
- 북한이 한국에 미사용 핵연료봉의 매입을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1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 협의 당시 한국에 미사용 핵연료봉의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6자 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우리측 농축 활동의 즉시 중단 등을 수용할 경우 그 대가로 우리측 101.9t분인 핵연료봉 1만4천800개를 사줄 수 있는지를 타진함.
  - 북한이 6자 회담의 사전조치 이행과 관련 한국 등에 대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인데, 한국은 그러나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 이행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교섭하지 않는다는 한·미·일의 합의에 따라 핵연료봉을 사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함.
- **"그랜드바겐에 北 관심..6자 열리면 토대될 것"(10/2,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에 관심을 표명해 양측간에 세부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당국자는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 랜드바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면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랜드바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할 경우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구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9월 공개 제안한 이후 북한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음.
  - 이 당국자는 "1차 비핵화 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그랜드바겐을 공식 설명했고 북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2차 비핵화 회담에서 상당한 질문을 던졌다"면서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우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됐다"고 소개
  - 그는 "북한이 처음에는 그랜드바겐을 남북 간의 일로만 생각했었으나 우리의 설명을 듣고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해한 듯하다"면서 "북한이 질문을 가져왔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
  - 이어 "6자회담이 정체된 사이 그랜드바겐을 토대로 사전협의를 해왔다"면서 "미국과는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그랜드바겐의 대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임.
  -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해 북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으니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면서 "북한이 북미 후속대화든 남북 비핵화 회담이든 '이것을 빨리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
  - 그는 "비핵화 사전조치에는 양보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과의 회담이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란 쉽지 않으며 여러 차례 대화를 거쳐야 일이 된다"고 말해 후속 남북-북미대화 과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 북한이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에서 한국에 미사용 핵연료봉의 매입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핵연료봉 매입은 이미 2008년 논의됐던 사안으로 과거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매입을 요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사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변

### 3. 대남정세

#### ● 홍준표, 30일 북한 개성공단 방문(9/27,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30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 홍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 개성공단을 실무방문한다"면서 "난 7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방문 용의를 밝힌 뒤 지난 22일 통일부장관과 협의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의사를 타진했고, 오늘 오후 북한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이 와 방북 신청을 했다"고 밝힘.
- 홍 대표는 "한나라당 창당 이래 당 대표로서는 공식적으로 첫 방북"이라





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로부터 애로를 청취해 해결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를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

- 홍 대표는 방북 배경에 대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판단했다"면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박왕자씨 피살 사건, 연평  
도 포격사건이 있었지만 정치·군사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기에는 어  
려움이 있어 남북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  
해보자는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라고 부연

● **북민협, 수해지역 인도지원차 30일 방북(9/28, 연합뉴스)**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박종철)는 30일 개성을 통해 황해북도 강  
남군에 밀가루 등 약 4억 원 상당의 인도지원 물자를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민협에 따르면 전달되는 물자는 밀가루 250t을 비롯해 의약품 2억여  
원 어치, 영양식 12만 캔, 운동화, 아동내의 등으로 강남군 장교리, 당  
곡리 소재 소학교와 탁아소에 분배될 예정이며, 지원물자는 새누리좋은  
사람들, 굿피플, 기아대책 섬김, 남북나눔 등 8개 단체에서 마련했다고  
뉴스는 전함.

● **협력기금에 '北 자연재해 지원' 신규 편성(9/29, 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당국 차원의 대북 자연재해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5천448억 원을 편성  
하고 이 가운데 '대북 자연재해 지원' 명목으로 150억 원을 새로 반영
- 올해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은 5천80억 원이며, 당국 차원  
의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은 6천429억7천400만원으로  
올해보다 6.1% 늘었다고 뉴스는 전함.
- 예산안은 일반예산 2천139억 원과 새로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합  
친 것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존 일반예산에 포함해왔던 제2하나원  
신축(170억 원), 하나원 체육관 신축(2억7천만 원) 등으로 구성 되었으  
며, 일반예산 가운데 북한정세분석 관리(6.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2%), 남북회담(6.7%), 통일교육(28.5%) 등의 예산은 올해보다 모두  
늘었다고 뉴스는 전함.

● **"대북원칙 유연한 상호주의 전환돼야"(9/30,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개성공단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번 방문  
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원칙이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홍 대표는 이날 7시간에 걸친 개성공단 방문 직후 입경 전용 게이트 앞  
에서 가진 즉석 기자회견에서 "대북 원칙을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  
한 상호주의로 가자고 요구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번 방문이 작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내려진 5·24 조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성공단은 경제공동체로 남북이 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자, 평화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지점"이라며 "5·24 조치 중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노력 하겠다"고 밝힘.
- 홍 대표는 공단 발전방안에 대해 "개성과 개성공단 간 열악한 도로에 대한 (입주기업 측의) 보수 요청이 있어 정부에 이를 요청하고, 5·24 조치로 건축 공사가 중단된 기업들이 있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 하겠다"고 말함.
- 홍 대표는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의 입주율이 37%밖에 안돼 입주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에 있어 삼통(통신·통행·통관)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대답(9.30)】 南 당국의 "故 박용길 여사 조문을 위한 南北間 개성접촉 불허"를 '반인륜적 망동'이라고 비난(9/30, 중통)
- 北 「체신성」 대변인 담화(10.1), 남측의 對北방송 送出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동, 심리모략전"이라며 持續時 "방송본거지들과 가담자들을 섬멸적·무자비한 징벌" 위협 (10/1, 중통·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美 "北 진정성 판단할 충분한 증거 없어"(9/27)

-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대화 진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쪽으로 판단할 충분한 사례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판단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신중히 답했음.
- 그는 "우리는 여전히 남북 간의 개선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책임은 확실히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과의 추가 회담 문제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음.

##### ● "북미 후속대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릴 듯"(9/28)

-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돼 온 북미 후속대화가 그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8일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서두르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시일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정상회담 이후로 대화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 북미 양국은 당초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종료에 따라 내달 초 베를린, 제네바 등 유럽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제3국 도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아직 대화 시기와 장소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 측은 북미 후속대화에서 한·미·일이 제시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이 구체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임기 중 국내 언론과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목적의 진정성'(seriousness of purpose)이라고 부르는 진지함을 북한은 보여줘야 하며, 그것이 6자회담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현동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에드워드 케이건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회동해 북미



후속대화의 방향에 대해 긴밀히 조율했음.

- 한편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지난 21일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경수로를 제공받을 경우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UEP 중단과 경수로 제공은 서로 등가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음.
- 이 당국자는 "UEP 중단은 6자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북한이 취해야 할 사전조치이며 경수로 제공은 북한의 핵 포기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카드"라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

● 박길연 "6자회담 재개위해 당사국들과 협력"(9/28)

- 북한은 27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회담 당사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평화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당사국들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이었음. 따라서 박 부상의 이날 발언은 기존의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임.
- 박 부상은 북미관계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모든 근원은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 그는 "미국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한반도 핵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핵위협을 없애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불신과 긴장의 관계"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긍정적 해결을 위해 미국 측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음.

● "그랜드바겐에 北 관심..6자 열리면 토대될 것"(10/2)

-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에 관심을 표명해 양측 간에 세부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랜드바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면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1차 비핵화 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그랜드바겐을 공식 설명했고 북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2차 비핵화 회담에서 상당한 질문을 던졌다"면서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우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됐다"고 소개했음.



- 그는 "북한이 처음에는 그랜드바겐을 남북 간의 일로만 생각했었으나 우리의 설명을 듣고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해한 듯하다"면서 "북한이 질문을 가져왔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음. 이어 "6자회담이 정체된 사이 그랜드바겐을 토대로 사전협의를 해왔다"면서 "미국과는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그랜드바겐의 대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해 북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으니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면서 "북한이 북미 후속대화든 남북 비핵화 회담이든 '이것을 빨리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했음.
- 그는 "비핵화 사전조치에는 양보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과의 회담이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란 쉽지 않으며 여러 차례 대화를 거쳐야 일이 된다"고 말해 후속 남북-북미대화 과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음.
- 이 당국자는 북미 후속대화 시기에 대해 "이번 달쯤에는 북미 고위급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나 날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정해질 것"이라고 추정했음.
- 북한이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에서 한국에 미사용 핵연료봉의 매입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핵연료봉 매입은 이미 2008년 논의됐던 사안으로 과거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매입을 요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사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음.
-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1차 비핵화회담 이후 대화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본격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정상회담을 거론하기는 이르며 양측 당국자 간 회담이 열려야 그 다음의 남북관계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음.
- 그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과정과는 분리돼 있지만 전반적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음을 북한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고 돈과 관련된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가스공급은 러시아가 책임지는 것이며 협상은 주로 북·러 간에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당국자는 북한의 가스관 차단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북한이 차단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차단된 가스관 일부분에 차 있는 가스 밖에 없다"면서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음.
- 이 당국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대화를 했다는 게 성과"라면서 "회담 횟수로만 본다면 과거 정부보다 적은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회담에 앞서 약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 나. 미·북 관계

##### ● 美 구호단체들, 대북식량 지원 촉구(9/27)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승인하도록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마리탄스 퍼스를 비롯한 미국의 5개 구호단체들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식량 부족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내년에 중대 위기국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이달 초 북한에 수해 구호품을 전달하고 돌아온 5개 민간 구호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구호품이 민간에 전달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했다면서 북한 지역에서 폭우와 폭풍으로 건물과 도로,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데 놀랐다고 말했음.
- 사마리탄스 퍼스의 메티 엘링슨은 "북한의 건강과 식량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미 배고픈 어린 아이들이 지속적인 식량부족과 더러운 물, 열악한 위생 상태에 따른 설사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엘링슨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훨씬 큰 위기상황이 전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음. 나아가 그는 구호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왜 여성과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춰 수개월 전에 수립된 자신들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우리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인 십자포화에 휘말려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음. 5월 북한을 방문했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에 대해 식량지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미국 공화당측도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할 경우 북한이 이를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내년의 기념행사에 활용하거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전용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

##### ● 美, 인신매매 방지미흡 제재대상에 北재지정(10/1)

-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미국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 지정했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이 같은 대통령 결정 사항을 밝혔음.
- 북한은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마다가스카르,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미 정부의 2012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됐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등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자금 지원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음.

-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의 경우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음.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음.

#### 다. 중·북 관계

##### ● 북·중, 총리회담서 경제협력 강화 약속(9/27)

- 북한과 중국이 총리회담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음. 북한의 최영림 내각총리와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장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무역·투자·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음.
- 회담에서 원 총리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당과 정부는 양자 관계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교류, 전략적 접촉 심화 및 공동 이익 보호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원 총리는 이어 "최근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찬사를 보낸다"며 "중국은 북한과 더 많은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자국 사정에 맞는 발전방식을 찾아가는데 지지를 보내며 (그와 관련해) 능력이 닿는 대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원 총리는 아울러 "양국이 무역·투자·사회간접시설·자원·농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에 속도를 내자"고 역설했음. 원 총리는 아울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모든 각 측이 접촉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에 최 총리도 "북측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해왔으며, (그런 견지에서) 중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해갈 것"이라고 밝혔음. 최 총리는 이어 "북측은 중국과 무역 및 사회간접시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서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환영하고, 편의 제공을 약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 ● 中 조선족 기업가협회, 北라선 방문(9/27)

-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이 최근 북한 라선특구를 방문,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음. 27일 조선족기업가협회에 따르면 표성룡 회장을 단장으로 한 회장단 16명이 지난 17-19일 라선특구를 방문해 라선시로부터 라선특구 개발 추진 상황과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소개 받았음.
- 방문단은 이어 라선의 제조업 시설과 호텔, 시장, 의류 가공 공장, 라선



시장 등을 시찰하며 라선 진출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음. 이들은 또 조선족 기업인들이 라선특구에 독자적으로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북한과 논의했음.

- 표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들은 이달 말 라선을 다시 방문해 북한측과 투자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임. 이번 방문은 중국 아태그룹이 라선에 추진 중인 시멘트공장 건설 공사를 맡은 연길(延吉)의 길림천우그룹 전규상 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졌음.
- 한 기업인은 "훈춘(琿春)-라선에 이르는 도로 보수가 완료 단계여서 연길에서 라선까지 소요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됐고, 라선 시내 도로도 보수돼 있었다"며 "건설 중인 아태그룹의 시멘트공장은 2년 뒤 완공돼 연간 1만t의 시멘트를 생산하게 된다"고 전했음.
- 그는 "라선시장에는 5천여 개의 점포가 있었으며 유통되는 물품 가운데 수산물을 제외한 쌀과 식품, 의류 등 대부분 생활용품이 중국산이었다"며 "쌀과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각각 5 위안(922 원)과 34 위안(6천270 원)으로, 물가는 중국과 비슷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업인은 "생활용품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 기업이 진출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또 다른 기업인은 "북한 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투자 보장과 우대혜택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전히 법률적인 보장이 미흡하다는 인상이었다"며 "북한의 법률 보안을 지켜본 뒤 투자 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음.
- 조선족기업가협회가 대북 투자와 관련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임. 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모든 체류 경비를 부담하며 조선족기업가협회 임원 30여 명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열었음. 그러나 이번 방북은 조선족기업가협회가 북한에 요청해 이뤄졌고 경비도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 中관광단, 하얼빈 향로 이용해 북한관광(9/27)

- 중국 관광단이 27일 평양-하얼빈(哈爾濱) 항공노선으로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중앙통신은 "전금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세일국제여행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1차 중국 관광단이 평양-하얼빈 국제항로에 의해 이날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관광단 규모와 관광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평양과 중국 하얼빈 사이에 국제 항공노선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노선이 정기노선인지 임시노선인지는 불분명함.
- 중앙통신은 이날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조선' 제목의 기사에서 "예술품전시 '아리랑'이 진행되는 기간 평양-상하이, 평양-시안(西安), 평양-하얼빈, 평양-쿠알라룸푸르 사이의 전세기가 정기 국제항로 외에 추가로 여러 차례나 운영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국가관광총국





홍인철 국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음.

- 북한은 7월1일부터 평양-상하이 항공노선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되고 7월28일 평양-시안 항로에 의한 관광이 시작됐으며 8월19일부터는 평양-쿠알라룸푸르 항로가 개통된다고 지난달 9일 밝힌 적이 있음.
- 한편 통신은 '세계관광의 날'(9·27)을 맞아 양각도국제호텔에서 북한관광설명회가 열려 김도춘 국가관광총국장이 설명회에서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등의 명승지들이 관광지로 훌륭히 꾸러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 후진타오 "北의 긴장완화 노력 지지"(9/28)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27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북한의 최영림 내각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영문과 중문 기사로 보도했음. 후 주석은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의 좋은 기회를 움켜잡아 한반도 상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신화통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방중 때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 총리도 김 위원장의 그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추구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후 주석은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를 소중히 간직해 왔으며, 중·북 우호관계 축진은 중국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고서 "최근 몇 년 새 양국이 밀접한 정치적 교류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성과 있는 협력을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음.
- 후 주석은 이어 "중·북 우호는 여러 대에 걸쳐 양국 지도자들이 이룩하고 지켜온 것으로 양국 당과 인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이를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것이 공동된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또 "양국이 고위급 방문을 지속하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켜가자"고 덧붙였다. 후 주석은 최 총리와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음.
- 최 총리는 후 주석에 이어 자칭린(賈慶林) 상무위원 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면담했음. 이 자리에서 자 주석은 "중국은 양국 지도자들 간의 중요 합의를 실행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황금평·라선 공동개발 구체안 연말에 나와"(9/28)

-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라선지구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가 28일 단둥(丹東)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다이워런 단둥시 당서기는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북·중 양국이 황금평과 라선에 공동으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후속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다이 서기는 "황금평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북 공동관리위원회가 이미 설립됐다"면서 "황금평과 라선지구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아울러 "중국 측은 황금평 공동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지역에 10km<sup>2</sup> 크기의 국가급 경제구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둥시 정부는 황금평 공동개발을 위해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운영하며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다이 서기는 26일 북한의 최영림 내각총리의 중국 방문에 언급, "최 총리의 방중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경제분야의 고위급 관료들이 동행했다"고 소개했다.
- 차이나데일리는 "최 총리가 이번 방중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난징(南京)과 양저우(揚州)를 방문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 ● 北총리, 중국 방문 마치고 귀환(9/30)

-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가 30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특별기편으로 귀환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내각 총리인 최영림이 중국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고 30일 특별비행기로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를 출발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 최 총리는 이날 귀환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방중 시 다녀간 양저우 경제기술 개발구를 찾아 첨단산업단지과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정오 태양에너지 과학기술공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 최 총리는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2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했고 다음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면담했다. 이어 최 총리는 28일 상하이를 방문해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중국관과 바오산철강그룹유한공사, 백련서교상품구입센터 등을 돌아봤고, 29일에는 장쑤성 난징(南京)시를 찾아 판다전자(熊貓電子), 위룬(雨潤)식품산업집단유한회사, 중산릉(中山陵) 등을 참관했다.

#### ● 김정일, 후진타오에 中 건국 62주년 축전(9/30)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일 중국의 건국 62주년 기념일(10월1일)을 앞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오늘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의 공동 명의로 된 축전은 후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귀(吳邦國) 전 국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



## 라. 일·북 관계

### ● 北, 정찰위성 발사 日 비난(9/27)

- 북한이 26일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일본의 정보수집위성 광학 4호기 발사에 대해 "이것은 일본 반동들이 조선반도 재침 야망을 기어이 이뤄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 23일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정보수집위성 광학 4호기를 실은 H2A로켓 19호기를 발사했음.

### ● "日, 김정일 측근 강해룡 납치혐의로 국제수배"(9/29)

- 일본 경찰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강해룡 전 대외정보조사부 부부장을 일본인 납치 혐의로 국제수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1980년 6월 미야자키(宮崎)에서 발생한 하라 다다이키씨(당시 43세) 납치 사건과 관련, 북한의 공작기관인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의 당시 부부장인 강해룡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달 중 체포장을 발부해 국제수배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국제수배된 북한 공작원 등은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게 됐음.
- 강 전 부부장은 지금까지 일본이 납치 혐의로 수배한 북한인 가운데 최고위 인사로 일본 정부는 향후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 측에 강 전 부부장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방침임. 강 전 부부장은 사건 당시 차관급인 대외정보조사부의 2인자였고, 각료급인 부장도 지낸 김 국방위원장의 측근이며, 현재 나이는 80대로 알려졌다.
- 경시청에 따르면 강 전 부부장은 하라씨 납치의 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82)에게 일본인 납치를 납치하도록 지시한 혐의임. 신광수는 이미 일본 경찰에 의해 '국외 이송 목적의 약취' 혐의로 2006년 국제수배됐음.
- 지금까지 조사 결과 강 전 부부장은 북한에 입국한 신광수에게 자금을 건네 일본과 한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1982년에는 무역대표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음.
- 경시청은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미약밀수 사건과 관련, 한국 법원의 공판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례를 참고해 하라씨 납치 사건도 강 전 부부장이 지시했다는 한국 법원의 공판조서를 일본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 전 부부장에게 체포장을 발부하고 국제수배하기로 결정했음.

### ● "日 의원들, 11월 중순 방북계획"(9/29)

- 일본 의원들이 11월 중순 방북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관전하고, 북



- 측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음. 방북 의원단에는 '일조(북일) 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 회장 겸 중의원(하원) 부의장을 맡고 있는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70, 자민당) 의원도 포함됐음.
- 방북 의원단은 북한에 이틀 가량 머물면서 11월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축구월드컵 예선 북한-일본전을 지켜볼 예정임. 이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면담을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북 의원단은 축구 시합 관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2008년 8월 이후 공식 접촉이 끊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타개의 살마리를 찾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임. 에토 의원은 북일 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 외에도 자신이 회장을 맡은 초당파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원들에게도 방북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중의원 부의장이 방북하는 데 대해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마. 러·북 관계

##### ● "방북 러 외무차관, 가스관 건설 등 논의"(9/30)

-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 인사와 북한 경유 한국행 가스관 및 송전선 건설, 철도 연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언론보도문을 통해 데니소프 차관이 김 제1부상의 초청으로 28일부터 사흘 동안 북한을 방문해 김 부상과 회담하고 같은 외무성의 궁석웅 부상과도 면담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데니소프 차관이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 보도문은 "지난 24일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 러-북 정상회담의 합의들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실무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 면담에서 정치, 인도주의적 교류, (남북러) 3자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경제 분야 협력 등의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 보도문은 특히 경제 분야 3자 협력 프로젝트로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 영토를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유사한 노선의 송전선 건설, 러시아와 남북한 철도 연결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핵 문제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문은 덧붙였다.

#### 바. 기 타

##### ● 뉴질랜드 시의원, 내주 북한 방문(9/27)

-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북쪽에 있는 소도시 포리루아의 시의원이자 부시장인 리테아 아흐 호이가 북한-뉴질랜드 친선협회의 초청으로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뉴질랜드 신문이 27일 보도했음.



- 웰링턴에서 발행되는 도미니언 포스트는 아흐 호이 의원이 부시장 자격으로 지난해 이 협회의 초청을 받았으나 가족의 질병으로 방문을 연기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아흐 호이 의원은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포리루아를 널리 알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자신은 시의원 자격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행 경비는 자신이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북한-뉴질랜드 친선협회의 돈 보리 회장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자신의 방북에는 리처드 로런스 와이카토 기술대학 교수도 동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은 1주일 동안 주로 평양에 머물면서 대학과 교회, 농장 등을 둘러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방문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지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관리들이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닉 레겟 포리루아 시장은 북한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 북한과 뉴질랜드 관계는 지난 1950년 6·25전쟁 때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질랜드가 파병하면서 냉각돼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정치인들은 종종 북한을 방문하고 있음.

### ● "北, 터키에 인도적 지원 요청"(9/29)

- 궁석웅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이달 초 터키를 방문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터키 일간지 '후리에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후리에트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 7~8일 터키를 찾아 터키 외무부 당국자들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터키 측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터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에 유아용 식품을 지원키로 했고 쌀 등 일반 식량의 지원은 터키 정부가 군대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유럽을 순방한 북한 대표단은 다른 동유럽 국가에도 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국, 작년 美재래식무기 수입 6억弗(9/29)

- 한국이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재래식 무기는 6억 달러어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9억 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를 구매하기로 미국 정부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돼 개발도상국 가운데



액수 기준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28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의 '2003~2010년 개발도상국 대상 무기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판매한 무기는 관련 부품, 건설, 지원, 훈련 등을 포함해 모두 6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음.
- 4년씩 합친 통계로 따지면 2003~2006년에는 한국이 29억 달러로 8위였으며, 2007~2010년에는 44억 달러로 6위를 기록했음. 양국 간 합의된 정부 간 구매계약 물량으로 집계했을 때 한국은 지난해 9억 달러로 8위를 기록했음.

#### ● 美캠벨, 내달 초 동아시아 순방..7일 방한(9/30)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순방한다고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음.
- 캠벨 차관보는 다음달 7일 한국에 도착,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내달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이슈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함. 이에 앞서 6일에는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양자 및 다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임.
- 캠벨 차관보는 또 8일부터 10일까지 홍콩과 브루나이, 태국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 고위 관계자와 경제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남. 그는 다음달 11일 마지막 방문국인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아시아·태평양 사무협의기구' 설립을 위한 2차 회의를 갖음.

#### 나. 한·일 관계

##### ● "日외상 내주 방한..노다 총리 방한 협의차"(9/28)

-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겐바 외무상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한국 방문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0월초 방한하는 방향으로 한국과 최종 조율중임.
- 방한시 겐바 외상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노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임. 일본은 노다 총리가 연내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한국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 이명박 대통령의 올가을 일본 방문은 연기됐지만 양국 정상외교를 실현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도 논의할 방침임.
- 겐바 외상은 지난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으며 김 외교통상부 장관도 노다 총리와 겐바 외상의 조기 방한을 요청했었음.



### ● 정부, 유엔총회 무대서 '위안부' 이슈화 방침(9/29)

- 정부가 일본 군대 위안부 문제를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이슈화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이슈제기 내용과 수위가 주목됨.
- 정부는 다음달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여성의제를 토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관련 법적 책임과 배상을 강조한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유엔 총회에서 간헐적으로 군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왔으나 최근 들어 수위와 강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 정부는 1992년 제47차 총회, 1994년 제49차 총회, 1995년 제50차 총회, 1997년 제52차 총회에서 인권 의제로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으며, 2007년과 2008년 여성의제로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문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군대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었음.
-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현재의 결정을 수용해 외교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양자적인 협의도 추진하겠지만 유엔 총회와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누가 어떤 내용과 수위로 발언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 인권논의의 또 다른 축인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정부가 1992년부터 거의 매년 군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다만 지난해의 경우 '군대 위안부 관련 해당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음.
- 이 같은 국제이슈화 움직임은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 측에 대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됨.

## 다. 미·중 관계

### ● 美재무부 차관, 北·이란제재 협의차 방중(9/26)

-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한다고 미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언 차관이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하는 기간에 중국 정부 당국자 및 민간부문 인사들과 만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재무부는 "코언 차관의 이번 방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끊고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무부는 코언 차관이 이란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도 중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코언 차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와의 거래 중단 필요성을 홍콩 방문 기간에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음.

#### ● 中, 美에 "군사·안보교류 손해 볼 것"(9/27)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7일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중·미 관계와 군사·안보 영역 교류에서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이는 미국이 대만의 F-16 A/B 전투기 개량을 위해 총 58억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겨냥한 것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2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가진 별도 양자회담에서 대만에의 무기패키지 판매 철회를 촉구하며 양국 군사분야 협력관계 중단을 경고했음.
- 홍 대변인은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와 관련해 "역내와 역외국가 할 것 없이 모두 항행자유 수혜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난사(南沙)군도와 그 부속해역에 중국은 변함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라. 중·일 관계

#### ● "中해양조사선, 센카쿠 日수역서 조사"(9/26)

-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사활동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조사선은 25일 오후 2차례에 걸쳐 센카쿠 열도의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일본 측 EEZ에 진입해 조사활동을 했음.
- 중국 해양조사선은 당초 일본의 EEZ내에서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으나 오후 5시55분과 10시13분 항해한 곳은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구역이었음. 이 때문에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현장에 출동해 중국 조사선에 무선으로 '조사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받아 중국 조사선은 사전에 허용된 해역으로 이동했음.

#### ● <中, 日·比 남중국해 논의에 민감 반응>(9/28)

-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논의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8일 1면 전면을 털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필리핀의 베그니노 아키노 대통령이





-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남해(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동맹'을 맺었다"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음.
- 이 매체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설하고 안보분야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이 필리핀 해군 전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해당 분쟁에 개입하려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음.
  - 이 매체는 특히 일본 외무성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논의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결국 중국을 겨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전했다.
  - 환구시보는 그러면서 "아키노 대통령이 한 달 전 방중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13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서 이처럼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본과의 연대에 나서는데 중국 인민의 99%가 분노하고 있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일본과 필리핀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 내용을 전하면서, 양측이 지난 9일 부국장급 회의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실무회담을 벌인 바 있다고 전했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필리핀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주변 섬)에 대한 중국·일본 분쟁에서 일본 지지 입장을 밝히고, 일본은 남중국해 갈등에서 필리핀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게 중국 내의 대체적인 분석임.
  - 중국은 자국을 배제한 채 필리핀이 지난 22~23일 마닐라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해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해왔음.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필리핀이) 아세안과 중국 간 대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남중국해의 핵심인 난사(南沙)군도 및 그 부근 해역과 관련해 중국은 모두 자국의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필리핀은 소유권 다툼 여부로 따져 분쟁과 무분쟁 해역으로 나눈 후 공동 또는 독자 개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마. 중·러 관계

##### ● 中 "푸틴총리 내달 11~12일 방중"(9/3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다음달 11~12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29일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총리는 방중 기간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제16차 중국·러시아 총리회담을 할 예정이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도 면담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음.
-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6년부터 총리회담을 해왔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양국 관계와 국제 및 지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



- 계인 양국이 최근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권, 안전, 발전 등의 핵심이익 문제에서 서로에 대한 지지가 견고해지고 정치적인 신뢰가 깊어지면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 홍 대변인은 아울러 "오는 2015년의 중국·러시아 간 무역액이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 5년 후인 2020년에는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커지는 등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또 후 주석이 이날 오전 중국을 방문 중인 칼레마 모틀란테 남아프리카공화국 부통령을 접견했다고 밝혔음. 모틀란테 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초청으로 27일부터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이며, 중국 측과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푸틴, 中총리에 건국 62주년 축전(10/1)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건국 62주년을 맞은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러시아 총리 공보실이 1일 밝혔음.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총리는 전문에서 "우호 국가인 중국이 대규모 사회경제 개혁에 성공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역동적인 내부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건설적 정책은 중국 국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국제정세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푸틴 총리는 "러시아와 중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협력 수준에 도달했으며 정치·경제·과학기술·인문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친선우호협력 조약 체결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행사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 푸틴은 양국 협력을 위해 중요한 장치는 국가 지도부 간의 정기적 만남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협상이 양자 협력의 법적 기반 확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진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바. 기 타

● 가스공사 "남북러 가스관 차단되면 LNG로 받을 것"(9/26)

-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26일 러시아 가스를 남-북-러 연결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PNG(파이프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가 가스관을 중단시키면 PNG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받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음.
- 주 사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가스관이 차단됐을 때 그 방법에 대해 (러시아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는 로드맵이 확정됐을 때만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 그는 "(PNG 도입량을) 갑자기 750만까지 올릴 생각이 없고 100만씩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PNG 도입에 따른) 수요 자체를 바깥에서



- 얻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PNG 도입량이 750만t에 달해 국내 수요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 제3국에 초과양 만큼 판매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뜻임.
- 주 사장은 "구매계획에서 200만t 감량이 가능하고 최근 계약한 600만t에 대해서는 제3국 판매조항을 전부 집어넣었다"며 "따라서 800만t 정도는 외국에 판매할 여지를 가졌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 중국은 해안에 짓고 있는 LNG 터미널이 자체 수요를 충족 못해 우리에게 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일본도 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며 공급 초과량의 제3국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러시아의 남북러 가스관 추진 의지에 대해 "지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파이프라인을 끝내놓은 상황"이라며 "러시아 자체를 위해 동북아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 육상 가스관 대신 해상 가스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해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며 "해상으로 오나, 북한으로 오나 북한과 협상이 있어야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의 해저가 2천 500m인데다 그 지역을 통과하면 가스관이 부식돼서 안된다"고 답했음.
  - 가스관 이용시 북한에 지급하는 통관료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가스만 사고 가스값에 다 포함된다"고 언급, 가스값에 통관료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관 건설사업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공사는 러시아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 건설공사에 참여할 계획은 있지만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 北리종혁 "가스관사업 남북러 모두에 이익"(9/27)

-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남북러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독립 언론매체인 '제4언론'이 27일 보도했음.
- 이 매체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이 이뤄지면 우리도 덕을 본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보다 남측이 더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또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북한)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테두리를 벗어나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조선반도와 동북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와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남측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사업 추진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남측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돼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리 부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남측이 요구하는 신변안전 보



장에 대해서는 "이미 최고 수준에서 합의해줬다. 문제는 남조선 당국의 대북 대결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고, 남측의 금강산 관광은 새로 제정된 법에서도 현대아산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하며 결국 "남측 당국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은 5·24 대북 제재조치다. 이것이 해결돼야 북남 사이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최근 통일부 장관도 교체하고 그랬다는데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해 봄이 왔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음.
-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행태를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 북남 수뇌회담이 가능 하겠는가"라며 "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없다"고 말했음. 리 부위원장은 북중 경제협력 과제인 황금평 개발 사업의 경우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 <한중일 3각협력 '틀잡기'..협력사무국 문 열어>(9/27)

- '동북아 삼각협력'의 추진체가 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27일 서울에서 문을 열었음. 지난해 5월 제주도 제3차 3국 정상회의에서 사무국 설치가 합의된 지 1년4개월 만의 결실임.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1999년 한·중·일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을 모색해 온 3국간 협력이 비로소 '제도화'됐다는 의미를 갖음.
- 이번 사무국 개소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역내에서 3국 공통의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국제기구가 출범했다는 데 외교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탈냉전 이후 지역화와 블록경제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동북아 역내의 지역협력 움직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실 동북아는 1990년대 중반까지도 '지역주의의 불모지'로 불릴 만큼 독자적인 지역협력의 움직임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그러나 동북아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상호 의존관계 심화 속에서 3국 협력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음. 3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완화하고 각종 현안을 공동 대응·관리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임.
- 작년 현재 동북아 3국은 세계인구의 22.3%(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달하고 총 경제규모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 교역량의 17.6%, 외환보유액의 45.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3국의 영향력은 팽창 일로임.
- 그와 동시에 지난 20년간 3국간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급증하면서 동북아 역내의 상호의존도와 협력의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가 되고 있다는 분석임.
- '협력'의 요인이 커지는 만큼 '갈등'의 요인도 늘어나고 있음. 역내의 군사적 긴장과 영토분쟁, 원자력 안전, 해양오염 등 3국간 이해갈등 조정



- 이 필요한 이슈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고 있음.
- 이 같은 동북아 역내의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협력사무국의 출범은 지속 가능한 3국간 협력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음.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 같은 3국의 협력이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임. 3국이 다방면에 걸쳐 실질협력을 이루게 되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임.
  - 3국 모두 6자회담 참여 멤버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 간 협력 강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맥락 속에서 탄생한 3국 협력사무국은 20여 명 안팎의 작은 국제기구에 불과하지만 안팎의 기대는 자못 큼.
  - 앞으로 협력 사무국은 3국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각종 협력·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갈 예정임.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현안이 되고 있는 재난관리와 원자력 안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 환경문제, 대학 간 교류사업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등 인적·문화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3국 간 존재하는 정치·안보적 갈등구조임. 이는 3국이 실질적 협력을 꾀하는데 근본적 한계를 드리울 수밖에 없음.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에는 한·중 간 긴장이 형성됐고 중·일 간 영토분쟁은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는 '뇌관'임.
  - 이에 따라 3국 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3국 지도자들이 가급적 갈등요인을 줄이고 협력요인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구체화된 내용물을 갖춘 실천적 조치를 검토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지적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